

살인사건으로 번진 ‘농촌 인력난’

해남서...“일꾼 왜 안 보내줘” 인력 중개업자 살해

인력 수급 문제로 술자리...말다툼 끝 범행 대전 도주했다가 붙잡혀...50대 농부 구속

해남에서 농번기 인력난에 시달리던 50대 농부가 일꾼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력 중개업자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경찰은 A(52)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구속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께 해남군 산이면의 공터에서 B(49)씨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B씨 소유의 1t트럭 적재함에 유기하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해남군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가 해남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자인 B씨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는 선후배로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5-6월 모내기를 도와 줄 외국인노동자 등 인력을 알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로부터 “이미 각 농가에 배정할 인력이 모두 빠져 있어 사람을 보내주기 어렵다”는 답을 듣고 화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 “왜 사람을 안 보내 주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B씨는 “술 한 잔 하며 이야기하자”며 A씨를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도 농촌 인력 수급 문제로 말다툼이 이어졌다.

경찰은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평소 B씨가 화물차 적재함에 넣고 다니던 농기구로 B씨를 내리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시신을 B씨 소유의 화물차 짐칸에 싣고 4km를 운전해 해남군 산이면의 한 비료야적장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7일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시 유성구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평서...“일손 없으니 도와줘” 친구 불러 살해 기도

10년전 유흥업 관련 동업할 때 불만 쌓여 “가지치기하다 실수” 부인했다 범행 시인

함평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핑계로 친구를 자기 농장에 불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구속됐다.

함평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의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체를 입힌 A(6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63)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농장 일을 하던 도중, B씨가 고장난 전기 양수기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 조그려 있던 순간을 노려 B씨에게 흉기를 두 차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내버려두고 농장 인근의 자기 집으로 복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상체를 손으로 감싸고 직접 농장 인근 주택가로 달려가 마을 주민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 인력을 알선하는 포주로, B씨는 유흥업소 업주로 동업하면서 서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때부터 B씨가 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B씨가 서울에서 별다른 직업없이 지낸다는 소식을 접하자, 지난달 말 B씨에게 “함평에 내려와서 농사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A씨는 18일 동안 B씨와 함께 숙식하며 뽕밭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가지치기를 하려다가 실수로 흉기를 떨어뜨렸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결국 고의성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직 B씨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만큼 급전적인 문제도 범행 동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과거사 문제 피해자 추모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30여명이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평화나비 과거사문제 피해자 추모제’를 진행하면서 시 오일 정신을 이어갈 것을 선포했다. /나명주 기자 mjna@

“회원 동의없는 퍼블릭 전환, ‘시정명령’은 정당”

광주지법, 전남도 손 들어줘

일부 회원들 동의 없이 골프장 운영방식을 퍼블릭(대중제)으로 변경한 골프장에 대해 전남도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도의 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7년부터 회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부터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2021년 1월부터 모든 회원들의 해택을 중단했다.

이에 회원들은 전남도에 A사가 동의 없이 회원 자격을 박탈했고 민원을 제기했고 전남도는 지난 2021년 8월 ‘잔존 회원에게 비회원보다 많은 혜택을 수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전남도의 시정명령이 처분사유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잔존 회원들에게 주는 입장료 할인혜택은 과거 비회원, 회원간 입장료 차이(47~55%)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전남도도 회원제골프장 영업 종료일까지 회칙을 준수 하라고 명령한 것은 체육시설법상 회사의 준수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잔존 회원들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개발조합·시공사 상대 하자보수 소송 입주민들 승소...광주지법 “15억원 줘야”

광주 각화 골드클래스

‘아파트 각 동 옥상-옥탑 벽체 0.3mm 미만 층간 균열’,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벽체 마감 미시공’, ‘발코니-실외기실-다용도실 결로, 곰팡이 오염, 페인트 벗겨짐’, ‘특별피난계단 출입 방화문 유호폭 미확보’ 등.

법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자로 인정한 항목들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대혁)는 각화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문화동각화 주택정비사업조합, 보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보광건설 주식회사, HU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 보광건설을 상대로 총 27억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15억여원을 인정했다. 또 HUG에게는 14억9000만원을 청구했으나 9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아파트는 7개 동 635세대, 임대세대 1개동 81세대 규모로, 분양자인 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5년 4월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다. 같은 시기 HUG는 시공사들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권자인 광주시 북구청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주이후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4월께 조합과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보수공사를 했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남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3차례에 걸쳐 분양세대 635세대 중 622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하자라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하자가 사용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위법 아냐”

광주지법, 무효 소송 기각 결정

법원이 기초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미리 의장단을 구성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무소속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 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선출을 진행했고 당시 김 의원이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의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미리 정한 것은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퇴장했다. 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을 선정하고 의장단을 선출했고 김의원은 서구의회 구성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해명 요구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